

大學 研究機能의 활성화

吳 澤 燮

(高麗大 研究交流處長)

1. 들어가는 말

대학의 이념과 목표는 [우리나라의 전 대학이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의 발전이란 외형적 발전 측면, 즉 우수학생의 유치, 건물, 학생의 증원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왔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인 것이다. 대학이 우리나라의 大衆의 高等敎育을 전담하여 인재를 양성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다. 이제는 대학의 敎育이 대중적 고등敎育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간 경쟁대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國際的인 敎育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敎育은 전환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대학敎育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대학敎育의 발전방향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보나, 여기에서는 대학에서의 研究 活性化를 위한 여러 가지 현행,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대학敎育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研究 與件

오늘날 대학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오랫동안 시인되고 정당화되어 왔던 그 자체의 본래적 의의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기능이 아무리 다양해지고 분화되었다 할지라도 大學存立의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는 학문연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기능을 지식전수와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라 한다면 연구는 이들 모두를 활기치게 하고 의미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것이다. 한국敎育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敎育과 연구, 사회봉사 기능 중 '60년대에는 조사대상 교수 중 70%가 敎育기능을 중시하고, 23%가 연구기능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0년대에는 각각 66%와 26%로, '80년대에는 64%와 29%로 연구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젊은 교수들 사이에 敎育보다 연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교수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교수들이 과다한 講義 負擔을 안고 있는데다 마음 한구석울 짓누르는 학생 지도, 학사문제 처리 등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차분히 '재충전'에 전념할 수 있는 정신적·시간적 여유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한 주에 20시간 가까운 과중한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들은 강의 노트의 재정리에만

도 눈코 뜰 겨를이 없을 지경이라는 푸념이다. '80년대 들어 대학이 급팽창하면서 교수들의 연구여건은 그 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우선 교수 1인당 학생수가 '78년의 24명에서 10년 동안 줄어들이는커녕 2배 가까이로 늘어났으나 교수총원은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92년 6월 30일 현재 전체 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기준 대비 70.5%(의학계열 제외)로 국립대가 84.7%이고 사립대는 65.2%이다. 전체 97개 사립대 중 70여 개 대학의 교수 확보율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 40%에 못 미치는 대학도 있다.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이 국·공립대는 1:22.4인 데 비해 사립대는 1:37.8이다. 전체 평균은 1:28.8이다. 물론 이 확보율은 대학원생들을 감안하지 않고 집계된 것이다. 대학원생까지 감안한 교수 확보율은 터무니 없이 낮아질 게 틀림없다. 구미 대학의 주당 6시간의 2배인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가 55%나 된다는 교육부 통계도 있다.

교수의 연구를 저해하는 것은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중한 강의 부담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부족, 자료활용의 어려움, 열악한 연구비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문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圖書館藏의 경우,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1개 대학 중 장서를 100만 권 이상 보유한 대학은 서울대(138만 2,348권)와 고려대(109만 7,469권)뿐이다. 도서관에 5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는 대학도 14개 대학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하버드대가 1,180만 권, 예일대 880만 권, 일본의 동경대 600만 권으로 우리의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보면 研究費의 액수는 하루 평균 1천 5백 원 꼴이다.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 건수는 0.29건으로 3명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최근 5년간 외부에서 받은 총 연구비 수혜건수는 641건이며, 해당 기간 동안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 수혜 건수는 약 1건이다. 대학,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3개 기관간 박사학위 소지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1989년 현재 대학 79%, 연구기관 15%, 기업체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합한 연구개발비 총액의 9.9%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70%가 기업체에 투자되며 나머지는 연구기관에 투자되고 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비의 76.2%가 연구기관에 투자되고, 16%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연구비의 41.5%를 대학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학들은 연구개발비 총액의 70.1%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교수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다. 우리 대학교수들의 연구성과는 대학에 따라, 보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매년 발표되는 논문 건수, 단행본 발간 및 해외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편수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90년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에 발표하는 연구논문 편수가 교수 1인당 평균 0.9편으로 1편이 채 못 되고 신학과와 개방대를 제외하더라도 1.3편 수준에 머물렀다. 또 소속교수의 논문발표량이 1인당 1편에 못 미치는 대학이 전체의 47.9%에 달했고 0.5편 미만도 26.9%나 됐다. 교수 1인당 총 저서수(번역서 포함)는 평균 0.2권으로 5년마다 책 1권을 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88년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논문은 1천 2백 70편으로 세계 38위이다. 언어 등 환경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 33만 5천 8백 편, 영국 7만 1천 1백 편, 일본 6만 9천 2백 편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 7천 3백 40편, 대만 1천 8백 편, 이집트 1천 5백 편에도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교수수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수업부담, 학생지도 등 연구의 업무부담, 연구비 부족, 연구시설 열악 등 현재의 대학여건에서 당장 연구여건이 파격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학의 재정적 취약성을 현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大學의 研究風土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대학에 주어진 과제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다.

3. 改善方案

1) 大學 附設研究所의 내실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87년에 펴낸 『대학부설 연구소총람』은 전국 134개 대학에 모두 979개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수에 비해 우리 대학의 연구소들은 전체적으로 구조와 기능 양면에서 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학문연구, 정보교환, 산학협동, 사회봉사’라는 본래의 기능을 연구소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시설과 인원, 그리고 충분한 연구운영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설 연구소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87년 한 해 동안 5백만 원 이상의 연구기금을 조성한 연구소는 16개로 1.6%에 불과했다. 더욱이 979개나 되는 연구소들이 거느린 전임연구원이 모두 합쳐서 33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연구소의 성격이 왜곡돼 있고 제 구실이 어려울 만큼 구조적으로 부실한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학교와 재단측의 무관심을 들 수 있다. 결국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연구소장은 흔히 프로젝트로 불리는 외부 유료용역을 따와야 한다. 사회과학계통에 더욱 심한 이 用役研究의 성행은 오늘 우리 대학연구소의 정립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구소의 연구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간 유사 연구소의 연구협동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연구소간의 自律的 競争과 協力體制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쟁은 대학별 특수성을 강화하고 연구에서 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협력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대학간 상호보완을 위해 필요하다. 자율적 경쟁과 협력체제는 국내 대학간은 물론 외국 대학과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연구소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최소한의 물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연구소 업적평가의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고 연구소 전임교수제를 도입하는 일 등이 추

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 위주의 재정지원에서 대학 부설연구소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새로운 연구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대학 부설연구소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部處間의 대학 연구지원 역할을 정립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일반·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며, 기타 부처는 과학기술에 관한 목적사업 위주로 지원토록 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간 연구지원이 균형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산·학·연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이 실험·실습 기자재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연구자료와 기술정보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대학 겸임교수나 碩座教授로 임용하는 한편, 산업체 위탁교육체제를 도입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 연구소 근무실적을 대학원 과정의 연구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특히 과학적 연구결과를 신속히 산업기술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科學工團을 대학 주변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학공단은 동일지역에 집결해 있는 대학, 기업체 부설 또는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기술혁신 촉진, 첨단 산업체 창업, 기반시설의 공동사용, 대학과 기업체의 공동연구, 대학(원)생에 대한 실제적 수습기회 제공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産·學·研 協同의 활성화

21세기를 향한 길목에서 과학기술에서의 산·학·연의 學際的 협동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재론할 여지가 없다. 산업발달에 필수적인 인력을 공급하면서 기초 및 응용과학의 산실인 대학에 산업체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윤과 직결되는 기술혁신의 과실을 거두고, 나아가서 산업체간의 연구조합 결성 등에 의해 연구개발활동 비용을 극소화하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진다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라는 과학기술의 순환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으로써 어느 이론이 언제, 어떻게 실용화되어 산업상의 이득

을 즐린지 알 수 없기에 산·학·연 협동은 필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분야간 협동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의미 있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현대기술의 복합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협동연구 활동의 필요성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만들지 말고 大學間 協助體制를 공조해 총괄책임대학 아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내에서 산·학·연 협력체제가 최초로 본격 작동된 것은 1986년 설립된 포항공대와 이듬해 발족한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사이의 협동체제로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수행되어 온 기업별 위탁연구, 연구조합 위탁연구, 기업창출, 아이디어 은행으로서의 다양한 활동과 서울공대의 기업과의 연결 등도 合同研究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최근 기초연구진흥방안에 의한 우수연구집단 육성 등도 산·학·연 협동의 기반을 닦기 위한 작업이었고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 설치('92년), 지식산업연구단지 조성('95년) 등은 협동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전략이라 할 것이다.

산·학·연 협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대에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산·학·연 綜合研究園地(Technocomplex)'이다. 이는 연구개발 주체간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총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산업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조직이다. 기존의 산학협동체제와 달리 참여 기업과 연구소는 각각의 연구소 혹은 분소를 연구단지 내에 설립하여 자개의 고유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연구단지내 타 참여사와의 기술정보 교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분야의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테크노콤플렉스는 산업체(현장지식, 생산기술), 대학(기초연구, 인력양성), 연구소(응용연구, 연구경험) 각자가 갖고 있는 특유의 기능을 조화시켜 더 특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산·학·연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술정보를 상호교환하게 되어 연구와 설비투자자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같은 장소에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애가 극복되어 첨단기술개발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제 테크노콤플렉스가 자리잡게 되면 명실상부한 산·학·연 일체의 연구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정착하여 기술독립의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3) 教授 研究年制 실시

교수가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다 보면 큰 업적을 내기가 무척 어렵다. 대학에서의 교수 연구년제는 해당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대학사회에 도입된 초기에는 安息年制 또는 줄여서 안식년이라는 표현이 더 보편적이었다. 이것은 영어의 sabbatical year, sabbatical leave에서 옮긴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60년대에 서강대에서 시작한 안식년제와 유급 특별휴직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시작하는 국내 대학들은 안식년제라는 초기의 표현보다는 연구년제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유급 특별휴직제를 시행해 오던 몇몇 대학들이 최근에 와서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여 시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한신대('85), 동국대('89), 연세대('90), 성신여대('90), 고려대('91), 이화여대('91) 등이 포함된다.

연구년제의 목적은 대학에 따라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시간을 확보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문에 대한 애착과 창의성을 고무하고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대학교는 대단히 적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처음부터 이상적인 연구년제를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 하더라도 각 대학마다 기존의 유급 휴직제나 해외파견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완하여 연구년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연구년제 신청자격은 대체로

길게는 10년, 짧더라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이어야 한다. 최근의 학문발전, 특히 자연 과학 분야의 학문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어도 6년 정도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년제의 수혜기간 동안 교원들이 신분상으로는 재정적으로 아무런 불안요인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현재 고려대에서는 매년 46명에서 50명 정도가 연구년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저술활동, 대형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에 사용되어 명실상부한 연구년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4) 大學院의 研究機能 강화

대학원 교육은 전통적으로 학자와 교수요원의 양성을 담당하였지만,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어 가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공급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활동은 매우 부진하여 그 연구성과가 저조하며, 새로운 기초이론과 기술을 국내의 연구활동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보다 선진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원 교육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의 대학원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일부 대학원은 충실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기보다는 경력과 간판을 선호하는 사회의 풍토에 영합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9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 수는 337개(일반 100개, 전문대학원 237개)로 재학생 수는 10만 1천 4백 33명이나 된다. 그러나 교육법상으로는 대학원 설치기준령조차 없어 대학원 교육의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박사학위 남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이 부실화된 요인을 살펴보면 교수의 과중한 강의 및 학생지도 부담으로 연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 도서관, 전자계산소, 연구기관 등 연구지원시설의 빈약, 대학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수, 대학, 재단 등이 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

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며, 교육과 연구에서 우수성을 성취하려는 경쟁적인 풍토가 대학사회에 조성되지 않은 것도 大學院 教育의 不實化를 초래한 주요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학원의 양적 팽창과 함께 재정적 영세성도 대학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대학원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운영,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등 재정적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저하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원을 현재와 같이 등록금 차원의 보조만으로 계속할 경우 진정한 學問 後繼世代를 육성할 수 없다. 학문연구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과 연구여건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원의 연구여건을 조성하고 학문적 축적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학문적 연계성을 확립하는 것도 절실히 요구된다.

5) 教授 業績評價制 실시

우리나라 대학교육 제도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직접 또는 일본을 거쳐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임강사로 임용되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며, 연구 실적·능력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차면 발간논문수 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만을 거쳐 정교수까지 무난하게 승진하는 우리의 교수 임용·승진제도는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어느 선진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제도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만한 자극이 없는 가운데 교수로서의 전통적 권위는 최대한 보장받으려는 것이 적지 않은 대학교수의 실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연구 안 하는 교수들'이란 달갑지 않은 지적이 들려온다.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방지하며, 연구활동에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교수 업적평가제의 실시이다. 지금까지 研究評價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우수한 연구를 한 교수에게 별다른 혜택을 부여할 만한 지원책이 없었는데 이는 연구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교수 승진, 승급, 해외파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어 연구업적이 교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또한 교수개발 및 교수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승급과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기준을 인식시켜 주며, 이 기준에 비추어 각 개인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승진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영국 대학에서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임후 3년간의 試補期間 동안에 가장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되며, 특히 네번째 및 일곱번째 학기에는 수업지도, 연구, 학과에 대한 의무 등이 공식적으로 평가된다. 근래에는 3년간의 시보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교육, 연구 및 행정 능력의 평가에 합격한 전임 교수 후보자의 약 90% 정도가 정년이 보장되는 'tenure'를 받게 된다. 이는 대학교육이 급격하게 팽창되던 1960년대에 거의 모든 [젊은] 강사들이 한 차례의 면접과 형식적인 시보과정을 거쳐 정년보장 임용을 받던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앞으로 대학사회에서 교수들의 업적평가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그 하나의 좋은 예를 서울공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서울공대에서는 앞으로 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심사를 할 때, 반드시 국제수준의 연구업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수임용 및 승진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教授評價를 강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이제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강의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게 될 시기가 과히 멀지 않았다고 본다. 그것은 교수의 職務性을 강조하는 대학 내외의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전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교수들의 연구의지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제도가 마련되고 교수들이 이에 승복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술지 권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게재된 논문도 계량적인 점수로 종합, 이에 따라 보수나 승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교수 연구업적의 질적 수준을 단순히 발표편수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교수사회에 研究風土를 쇄신하려는 바람이 불지 않는 한 대학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4. 맺는 말

시작 부분에서 대학과 교수의 기능으로 지식 전수, 사회봉사, 연구활동을 이야기했다. 사회의 정보화·전문화가 가속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도 연구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문연구를 통해 대학은 그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능한다. 대학에서는 다른 연구기관과는 달리 순수연구와 응용연구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그 모순의 규명 및 통합이 동일한 과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에는 그 여건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열악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研究活動을 活性化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모색해 보았는데, 이 대부분이 재단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학이 한 나라의 지적 탁월성의 상징이며 진실을 숭상하는 의지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대학의 연구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그 길을 열어 가고자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정성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